

한은 6연속 기준금리 인상 단행

이창용 “경기 더욱 둔화될 것… 韓 금융안정 최우선 고려”

금통위원 다수 최종 3.5% 전망
최종금리 도달 후 인하시점 미지수
“물가 목표수준 수렴 확신 들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종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스

한국은행이 또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지난달 빅스텝(0.50%포인트 인상)보다 보폭이 작은 베이비스텝(0.25%p)이다. 5%대 물가 오름세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금리 인상이 불가피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경기가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금리인상 폭을 낮췄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에서 3.25%로 0.25%p 인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초까지 물가가 5%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금리인상은 대외적인 요인 외에도 우리나라의 금융 안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 베이비스텝, 한·미 금리차보다 금융 안정 고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가장 고려한 부분은 단기자금시장 경색과 가계 부담 가중, 금융시스템 불안 등의 위기 상황이다. 이 총재는 “미국의 연방준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종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스

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변동해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채권시장은 단기 초우량크레딧 물량을 중심으로 유효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금리는 최고 연 20%대까지 급등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증권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풀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예상치 않게 부동



자부담 180만원 ↑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출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추가 상승할 전망이다.

자부담 180만원 ↑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출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추가 상승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를 기록, 사상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상승폭(0.58%포인트)도 최대였다. 은행은 상승분을 고스란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반영한다.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연 8%를 돌파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올해 안에 연 9%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인 0.25%p 오르면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이 16만4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산출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리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32만7000원 늘어난다.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가 총 2.75%p 인상돼 늘어난 1인당 연간 이자부담은 181만5000원이다. 이는 지난 6월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1757조1000억원)와 비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변동금리비중(74.2%)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증가 규모를 시산한 결과 값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산 ABCP에 관한 사건이 생기면서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신뢰가 하락해 금리가 급격히 올랐다”며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에 비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금리 역전자는 무시못할 요소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미국과의 기준금리차는 75bp (1bp=0.01%p)로 좁혀졌다. 다만 미국 Fed가 다음달 15일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면 기준금리 차는 125bp로 벌어질 수 있다. 금리폭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다수 위원은 금리인상기 최종금리를 3.5%로 전망했다. 금통위원 3명은 3.5%를 바람직하게 봤고, 3명은 3.5~3.7%, 나머지 1명은 현 수준인 3.25%에서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최종금리가 어느 시기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총재는 “최종금리 도달 후에는 어느 시기까지 (금리가) 유지될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최종금리 도달 후) 물가가 목표 수준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금리인하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작년 8월부터 금리 2.75%p ↑ …이

“2060년 국가채무비율 145% 추산… 부가세·소득세 인상해야”

국회 지구보건복지포럼 개최

오유경 식약처장 특별강연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KDI 재정여력 확충 위한 정책과제
법인세 인상에는 부정적 입장 밝혀
“국민연금 기금 2054년 완전히 고갈”

우리나라가 인구구조변화 등에 대응 할 장기 재정 여력을 갖추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는 206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대비 3배 많은 144.8% 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일 발표한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에 따르면 모든 남세자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고, 2021년 기준 2조8600억원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면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약

크게 악화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 증가로 장기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현행의 법, 제도, 관행들은 유지된 상태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거시경제변수들에 의해 산출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44.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 49.7%의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2030년대 중후반부터 사회보장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 기금은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며 “재량지출의 효율화 없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유지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최대 230.9%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강조

했다.

KDI는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고, 장기 재정 여력을 갖추기 위해 부가세와 소득세 인상 방안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인구고령화로 확대되는 복지재정 수요를 주로 부가세와 소득세에 의존해 충당했다”며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GDP 대비 부가세와 소득세 세수 비중이 각각 4.3%와 4.8%로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OECD 국가들이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법인세 부담은 확대하지 않았다”며 법인세 인상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을 대표의원으로 하는 국회 지구총보건복지포럼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정관에서 ‘2022 연말 특별강연’을 열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특별강연 주제로 맡았다.

이날 특강에는 포럼 내 구성의원들과 보건복지와 면밀한 관계에 있는 제약사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국회 지구총보건복지포럼은 더불어민주당 9명과 미래통합당 의원 2명 총 국회의원 11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다.

이날 전혜숙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시스템이 전세계에 알려졌다”면서 “지난 팬데믹 동안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질서정연하게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고 확진자를 추적해 격리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았으며 코로나19 백신 모두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대단한 면모를 세계에 보였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최근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마약 중독자의 저연령화 현상과 근절을 위한 방안을 강연했다.

오 처장은 “마약사범이 과거에는 40대가 가장 많았지만 현재는 20대 마약사범이 전체의 31.4%를 차지하고 있다”며 “10대 마약 사범은 12배 증가해 현재는 2.8% 수준에 달하는데 이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진 탓으로 설명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10월 생산자물가지수 120.61… 23개월 연속 상승

한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영향

지난달 우리나라의 생산자물가지수가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소폭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만큼 10월 물가도 5%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2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0.61으로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7.3% 상승해 23개월 연속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 소비자물가와 약 한달 간의 시차를 가진다.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1월 소비자물가는 상승률도 5%대의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 중 공산품은 전월대비 0.3% 상승했다. 화학제품은 0.2%, 제1차금속제품은 0.3% 내린 반

면 석탄 및 석유제품은 1.9% 올랐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전력·가스 및 증기(10%)가 올라 전월대비 8.1% 상승했다.

서비스의 경우 운송서비스(0.6%),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4%) 등이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했다. 농림축산물은 수산물(1.5%)이 올랐으나 농산물(-11.2%)과 축산물(-4.5%)이 내리면서 전월 대비 7.3% 하락했다.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입물가를 더한 국내공급자물가지수(128.82)는 원재료(-1.6%)가 내렸으나 중간재(0.7%)와

최종재(0.3%)가 올라 전월대비 0.3% 상승했다. 공급자물가지수는 물가변동의 파급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출물가를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124.14)는 공산품(0.7%)과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8.1%)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7% 올랐다.

/나유리 기자